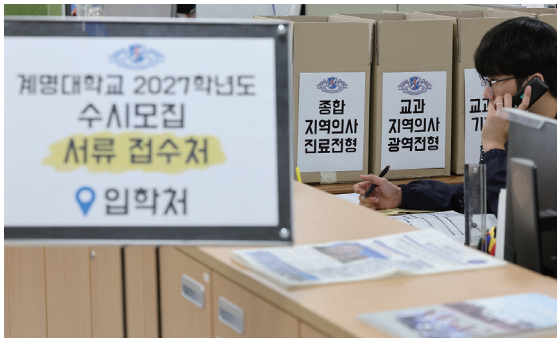
의대 수시 합격자 연쇄 이동 뚜렷
지방 의대·과학기술원 지원 증가

지난해 전국 의대 수시 모집에서 모집 인원에 육박하는 규모의 합격자가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의대에 중복 합격해 이동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는 지역의사제 도입과 의대 모집 확대가 맞물리면서 추가 합격과 정시 이월 인원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지방 의대 지원이 크게 늘고 4대 과학기술원 수시 지원자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 9월 7일 대구 계명대 입학처에 마련된 지역의사전형 서류함. ©연합

수도권 의대 교과전형 충원율 300%

지난 25일 종로학원이 대학별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6학년 전국 39개 의대 수시 모집에서 등록을 포기한 합격자는 1천728명이었다. 모집 인원 1천812명의 95.4%에 해당한다. 학생부교과전형은 920명 모집에 등록 포기자가 1천39명으로 충원율이 112.9%였다. 학생부종합전형은 892명 모집에 689명이 등록을 포기해 77.2%를 기록했다.

권역별 교과전형 충원율은 경인권이 300.0%로 가장 높았다. 서울권은 101.7%였다. 비수도권 전국선발 평균은 146.4%로 충청 183.3%, 대구경북 181.8%, 호남 177.8% 등이었다. 비수도권 지역인재선발 평균은 97.3%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입시 전문가들은 지방권 전국선발 합격생이 수도권 의대에, 경인권 의대 합격생이 서울권 의대에 중복 합격하면서 연쇄 이동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서울대 의대를 비롯한 일부 대학·전형에서는 등록 포기가 발생하지 않아 대학과 전형별 차이도 컸다.

수시에서 끝내 충원하지 못해 정시로 넘어간 인원은 11개 대학 50명이었다. 인제대가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대 11명, 한림대·원광대 각 5명, 연세대 미래캠퍼스 4명 등이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의·치·한·약·수 전체 지역인재·지역의사제 지원자는 2만8천270명으로 전년보다 10.5%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모집 정원 확대와 지원자 증가가 맞물리면서 올해 의대 수시에서도 중복 합격에 따른 연쇄 이동과 추가 합격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2028학년에는 지역의사제 선발 규모가 올해 466명에서 583명으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이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AI·반도체 기대감에 이공계 선택지도 확대

과학기술 특성화대학 지원자도 크게 증가했다. 4대 과학기술원의 2027학년 수시 모집은 2천67명 모집에 3만3천349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16.1:1을 기록했다. 지원자는 전년 대비 36.5% 늘었다. 학교별로 보면 디지스트가 28.6:1로 가장 높았고 유니스트 19.8:1, 지스트 14.4:1, 카이스트 9.7:1이었다. 디지스트 반도체공학과 지원자도 전년보다 54% 증가했다.

대학가에서는 인공지능과 반도체 산업의 성장, 기업 연계 교육과 취업에 대한 기대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과학기술원은 일반대학의 수시 6회 지원 제한을 받지 않아 의대 지원자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다. 지방의대 지역인재·지역의사제 지원자가 40% 넘게 늘어난 점까지 감안하면 과기원 지원 증가를 곧바로 의대 쏠림 완화로 보기는 어렵다. 의대 선호가 여전히 강한 가운데 이공계 최상위권 선택지도 함께 확대되는 흐름으로 보는 편이 적절하다.

취재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형사 처벌 추진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고의적·계획적인 국가시험 방해로 보고 형사 처벌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부정행위자의 수능 응시 자격 정지 기간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시험장에는 판별 전담 인력을 배치한다.

교육부는 지난 10월 29일 이런 내용의 '수능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 관련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스마트안경 부정행위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도록 고발·수사의뢰 등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005년 휴대전화로 조직적으로 정답을 주고받은 수능 부정행위 사건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다.

현재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기기를 시험 중 착용하거나 사용하면 해당 수능이 무효가 되고 다음 해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단순 반입·소지만 해도 시험이 무효다. 감독관의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심의를 거쳐 같은 제재가 가능하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응시 자격 정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올해 수능부터 시험장별로 전담 인력을 지정해 스마트안경 여부를 판단한다. 감독관이 의심되는 안경을 발견하면 전담 인력이 확인하고 필요하면 시·도교육청과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상황실에 판단을 요청한다. 감독관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와 청구 기간도 확대하고 2028학년부터 감독관 수당 현실화 등 처우 개선을 추진한다. 육안 판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기술 도입도 검토한다. 교육부는 시험장용 전파탐지기의 활용 가능성을 점검해 내년 수능 시험장 보급을 검토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제재 강화 방안을 대학별 고사에도 적용하도록 각 대학에 권고하기로 했다.

스마트안경이 일반 안경과 구별하기 어려워지면서 시험 관리도 형사 책임과 장기 응시 제한, 판별 인력과 탐지기술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강화되고 있다.

지역 거점 국립대 상위권 지원 늘었다

2027학년 대입 수시 모집에서 지역 거점 국립대 학생부교과전형에 지원한 상위권 수험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거점 국립대 9곳 가운데 8곳에서 지원자의 평균 내신 성적도 전년보다 높아졌다.

진학사가 2026~2027학년 수시 '점수 공개 서비스'에 실제 지원 대학을 입력한 수험생 가운데 지역 거점 국립대 9곳의 학생부교과전형 지원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내신 1·2등급대 지원자 비중은 26.3%였다. 지난해 20.5%보다 5.8%p 높아졌다. 의·치·한·약·수의학 계열 지원자는 제외됐다. 계열별 1·2등급대 지원자 비중은 인문 계열이 20.4%에서 24.4%, 자연 계열은 20.8%에서 26.2%로 높아졌다. 통합 계열은 19.2%에서 33.0%로 13.8%p 상승했다.

평균 내신 등급도 대부분의 대학에서 높아졌다. 인문 계열은 3.78등급에서 3.61등급, 자연 계열은 3.83등급에서 3.68등급, 통합 계열은 3.88등급에서 3.55등급으로 상승했다. 제주대를 제외한 8개 대학에서 인문·자연 계열 평균 내신이 높아졌다.

대학별로는 부산대가 인문 계열 0.29등급, 자연 계열 0.28등급 상승했다. 통합 계열에서는 전남대 0.78등급, 경상국립대 0.48등급, 충남대·부산대는 각각 0.45등급 올랐다.

지원 변화에는 등록금과 취업, 지역 대학 육성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진학사 설문에서 지역 국립대 지원자의 41.8%는 등록금 지원 정책이 지원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지원 이유는 합격 가능성 60.5%, 등록금·생활비 부담 완화 49.6%, 취업·진로 유리 34.9%, '서울:10개 만들기' 정책 기대 19.2% 등이었다.

다만 이번 분석은 진학사 점수 공개 서비스 입력자를 대상으로 해 전체 지원자의 공식 통계와는 차이가 있다. 또 평균 성적 상승이 곧 합격선 상승을 뜻하지는 않는다. 진학사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 여부와 충원 결과 등에 따라 실제 합격선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